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지시 제 4 호 (70-2011) 1977. 3. 22.

수신: 수신처 참조 **폐지** (83.1.25) 국무총리 지시 제 18 호에 의거  
제목: 외국 정부인사와 접촉시의 유의사항

모든 공직자가 외국 정부인사등과 접촉할 때 정부의 훈령이나 사전 협의없이 또는 이미 협의된 범위를 넘은 약속을 하므로써 예기치 않았던 정부 부담을 발생케 하고 또한 약속사항을 이행치 못하므로써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왕왕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외국 인사와 접촉할 때 유의할 지침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반 지침

- 가. 해외공관장 및 주재 공무원은 주재국 정부인사와 접촉할 때 정부의 훈령 없이 원조 또는 협력 제공등 정부에 부담이 가는 구체적인 대외적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모든 공직자는 해외여행중 외국 정부인사와 접촉할 때, 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부인사와 접촉할 때, 정부의 훈령 또는 사전 양해 없이 원조나 협력제공등의 구체적인 대외적 약속을 해서는 아니된다.
- 다. 상대측으로 부터 정부에 부담이 가는 협력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내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국외에서는 현지역 주재 공관장을 경유하여, 반드시 정부에 청혼한다.

- 마. 국외에서 운영유기타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지위 주재 공관장과의 긴밀한 협조를 거친후 명백한 언질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선 처리한 후 공관장 경유 본국 정부에 청문하고, 만일 즉시 회답을 주는 것이 제반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내용을 전보 또는 전화로 즉시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한다.
- 마. 대외접촉에 있어서는 주어진 임무의 범위를 넘어 상대측 으로부터 원조 제공 등 정부에 부담을 지우는 요청을 유발시키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바.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정부나 법인, 단체 등과 경제, 기술, 문화 협력 관계를 가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무부 장관의 견해를 들어야 한다.

## 2. 대 민간 지도지침

- 가. 관계 증앙관서의 장 및 해외공관장은 민간기업인이 외국 과의 상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연불수출, 합작투자등에 관하여 정부의 사전 양해나 허가 없이 계약 및 약속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 나. 증앙관서의 장은 산하기관 및 관계 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본 지시의 내용을 주시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후 처리지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제외공관장은 상기 '1. 일반지침'에  
의거하여 외국 정부인사와 약속을 하였거나 합의성명등을  
발표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서면으로 외무부 장관에 통보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무부는 그 내용이 원조 또는  
협력공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외경제기술 협력위원회'  
에 회부하여야 하고, 등 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심의한다.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 11 - 46.  
나 1.